

1. 총평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은 문제의 일부 지문의 경우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답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10번 문제의 행태기준평정척도법(교재 및 강의에서 행태기준평정척도법과 행태 관찰척도법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한 내용임), 16번 문제의 3번 지문(지방자치단체 조합 해산시 재산 처분), 20번 문제의 2번 지문(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경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답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시험문제는 이론은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고, 법령 문제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학자의 입장을 묻는 13번 문제의 경우 강의에서 Friedrich를 프리드리히(자유드리히)로 기억할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우수(합격권), 80점에서 90점까지는 보통, 75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5	개념문제	3
정책학	4	이론문제	10
조직이론	1	사례문제	2
인사행정론	4	법령문제	5
재무행정론	3	학자문제	-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조직이론 출제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 이론, 사례를 포함한 이론문제를 넓게 볼 경우 15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5문제이다. 법령 문제 5문제는 평균적인 출제빈도에 해당한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
중상	16, 20
중	1, 3, 4, 5, 8, 10, 11, 13, 14, 18, 19
중하	2, 6, 7, 9, 12, 15, 17

4. 당부 사항

-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특정 학자의 입장이나 법령 내용)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합격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권리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 2020년 일반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끝나면서 향후 학습방향 설정이나 학습계획 수립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본다. 알파행정학 카페에 질문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향후 학습계획 수립과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해설] ②(X).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하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재집권화 및 조정)를 중시한다.

비 교		신공공관리론(NPM)	탈신공공관리론(post-NPM)
정부 기능	기본 철학	시장 지향주의 -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 재규제,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가치	경제성, 능률성	민주성, 형평성도 함께 고려
	정부 규모	감축 - 민영화, 민간위탁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서비스 제공	시장 - 내부시장, 계약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조직 구조	기본 모형	탈관료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구조 특징	비행구적·유기적 구조 - 임시조직 활용, 분권화	재집권화(조정 중시) -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 개편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책임운영기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 총체 적·합체적 정부
관리 기법	기본 철학	자율과 경쟁, 성과와 책임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인사 관리	개방과 경쟁, 성과 중시	공공 책임성 중시
기타	역할 체계	-	역할 모호성 제거, 명확한 역할관계 의 안출(案出)
	고려 사항	-	환경·역사·문화적 요소 고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167. 핵심체크, p.68.

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2020지방7급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 ① X-비효율성
-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 ③ 비경합성
- ④ 파생적 외부효과

[해설] ①(X). X-비효율성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나 행정·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말하며, 주어진 생산요소로 최대의 생산(산출)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생산가능곡선에 도달하지 못한). 생산 과정에서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경우 X-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X).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행정조직의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현상을 말하며, 목표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X). 비경합성은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며, 비차감성이라고도 한다.

④(O). 박스 내용은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5-67. 핵심체크, p.28.

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해설] ①(X).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일반직, 전문경력관,公安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등이 별도의 봉급표를 갖는다(2019년 현재 11개의 봉급표). 따라서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②(O).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해당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 포함, 대통령령호처 별정직 공무원 제외)에 적용된다.

③(O).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는 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 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와 장기급여(퇴직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고,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④(O).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적용 대상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정답] ①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05-613. 핵심체크, pp.269-273.

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②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O).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O).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O).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특별회계 설치 사유>

- (1)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5개 :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재정용자특별회계 - 2007년 폐지)
- (3)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15개 :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환경개선, 우체국보험,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국가균형발전, 유아교육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④(X).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 즉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성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특별회계도 원칙적으로 목적(용도), 금액, 기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73-674. 핵심체크, p.302.

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형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2020지방7급

-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해설] ②(0). 진실형설계는 무작위 배정(추출)에 의하여 실험집단(정책을 실시하는 집단)과 통제집단(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는 진실형설계에 해당한다.

①③④(X). 단절적 시계열설계와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설계에 해당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비실험설계에 해당한다.

진실험설계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적 통제집단설계	
준실험설계	추조된 통제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노화준), 사후테스트(측정) 비교집단 설계를 비 실험설계로 보는 시각 있음(정정길 외) ㉢ 회귀불연속설계	
	재귀적 통제	㉠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비실험설계		㉠ <u>시계열분석</u> ㉡ <u>회귀분석</u> ㉢ <u>정책실시전후비교설계</u>	㉠ 통제적 통제 - <u>외생변수 영향력 통제</u> ㉡ 포괄적 통제 - <u>표준과 비교</u> ㉢ 잠재적 통제 - <u>관련 전문기의 판단과 비교(주관성 개입)</u>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32-335. 핵심체크, pp.141-143.

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해설] ①③(0).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고,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구 분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해당 국가	서구 선진자본주의(민주적 복지체제)	제3세계 후진자본주의(권위주의 체제)
주도 세력	이익집단(노동자, 사용자)	국가(정부)
상호작용	국가가 계급 간의 갈등을 조정 및 중재	국가가 체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계급 통제

②(X). ②는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조합주의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이용되었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반해 다원론(多元論, pluralism)은 엘리트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끌고오 반 영하고 있다고 본다. 다원론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익집단을 조직화하여 이익을 표출하면서 상호 경쟁한다. 다원론은 이러한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며, 정부가 이를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본다(개인보다 집단 역할 중시).

④(0).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고, 정책 분야 별로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고 본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39-246. 핵심체크, pp.101-104.

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해설] ①(0).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X).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정책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양태의 정책네트워크로서,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 영역별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하위정부와 철의 삼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하위정부와 철의 삼각을 구분하는 시각에서는 철의 삼각에 비해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관계가 보다 다양하고 연합이 느슨해지는 상태를 하위정부로 본다. 그리고 하위정부에 비해 철의 삼각이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③④(0). 아래 표 내용 참조

구 분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이슈공동체(이슈네트워크)
정책행위자	제한적, 폐쇄적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참여자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참여자 중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주도자도 변한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40-244. 핵심체크, pp.102-103.

8.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2020지방7급

-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장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해설] ①(X).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①번 지문처럼 공무원이 소속 장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된다.

②(0).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②번 지문처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0).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③번 지문처럼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0).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④번 지문처럼 공무원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①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636. 핵심체크, p.281.

9.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해설] ①(X).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X).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되는 현행 제도는 준예산이다.
 ③(O).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 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해당한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④(X). 정부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680. 핵심체크, p.305.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0지방7급

- ㄱ.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 ㄷ. 선정된 주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 | ㄱ | ㄴ | ㄷ |
|---------|---------|-----------|
| ① 강제배분법 | 산출기록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 ② 강제선택법 | 주기적 검사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 ③ 강제선택법 | 산출기록법 | 행태관찰척도법 |
| ④ 강제배분법 | 주기적 검사법 | 행태관찰척도법 |

[해설] ①(O). ‘ㄱ.’은 강제배분법, ‘ㄴ.’은 산출기록법, ‘ㄷ.’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 ㄱ. 강제배분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으로서, 집중화·관대화·엄격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 ㄴ. 산출기록법은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순 업무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정기적 검사법보다 정확하다.
- ㄷ. 행태기준평정척도법(BARS :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은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job)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task) 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 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후,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등 급	행태 유형
() 7등급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
() :	:
() 1등급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②(X). 강제선택법은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기술항목(비슷하게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는 문항으로 구성) 가운데서 피평정자의 특성에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주기적 검사법(정기적 검사법)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③(X). 행태관찰척도법은 마찬가지로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사례를 기준으로 평정하는 한편, 등급에서는 도표식 평정척도법과 유사하게 사건을 빈도로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한다.

평정항목	등 급	
	거의 관찰 못한다	자주 관찰한다
새 정책이나 내규가 시행될 때 게시판에 게시한다.	1 - 2 - 3 - 4 - 5	
주의력을 집중하여 대화에 임한다.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88-592. 핵심체크, pp.264-265.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2020지방7급

정부는 OO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OO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결과를 발표했다. OO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OO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 ① 역사요인 ② 검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해설] ①(0). 박스 내용 중 정적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것은’ 수질오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에 해당한다. 역사요인은 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실험 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②(X). 검사요인은 측정요인(시험요인, test 요인)이라고 한다. 측정요인은 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지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프로그램에서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만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스트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이들 문제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집행 후의 테스트에 앞서 이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테스트 점수가 높아지게 되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던 것같이 보고될 수도 있다.

③(X). 선발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을 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편견이다.

④(X). 상실요인은 정책 실시 중에 실험집단의 몇몇 구성원이 탈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한다면 이들 두 집단의 구성이 처음과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과에 대한 잠재적 편견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28-330. 핵심체크, p.141.

12.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2020지방7급

-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해설] ①(0).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은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②(X). 부패를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③(X). 부패를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제도 및 관리적 접근방법이다.

④(X).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이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34-635. 핵심체크. p.283.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해설] ①(X). 프리드리히(Friedrich)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②(X). 파이너(Finer)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O).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④(X).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형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934-943. 핵심체크, pp.425-430.

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020지방7급

-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해설] ①②③(O).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간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된 합리성, 대리인의 기회주의 행동 성향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④(X).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하는 경우 주인은 다수의 잠재적 대리인 중 자신에 원하는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60-161. 핵심체크, p.65.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 ②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해설] ①(X).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서, 일상적 행정 기능은 종적으로 기능별 조직의 지휘·명령을 받고, 문제과업은 횡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③(O).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그리고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다만,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 포스를 비교하는 시각에서는 태스크 포스를 좀 더 장기적인 조직으로 보기도 한다.

④(O). 네트워크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12-419. 핵심체크, pp.183-186.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 ②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X).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④(○).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841-842. 핵심체크, pp.385-386.

17.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②(X).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은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imagination)을 중시한다. ‘상상’은 소극적(부정적)으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적극적(긍정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①③④(○). 아래 박스 내용 참조

*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특징(D. Farmer)

- (1) 상상(imagination) : ‘상상’은 소극적(부정적)으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적극적(긍정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2)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 : 해체는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한다.” 또는 “행정학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는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영역해체(d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 학문 영역 간의 경계 파괴) : 포스트모더니티에 있어서의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 영역이 해체된다. 즉, 지식의 경계가 사라진다.
- (4) 타자성(alterity) : 타자성은 즉자성(I-ness, asmita)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자성이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를 말한다.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타자)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타자성은 ① ‘타인’에 대한 개방성, ② 다양성의 선호, ③ 메타설화(상위 설화,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원리)에 대한 반대, 그리고 ④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76-177. 핵심체크, pp.73-74.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④(X).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718-719. 핵심체크, pp.324-325.

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지방7급

-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해설] ①(O).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조직은 그 효과와 관계없이 사회 속에서 이미 합리화되고 제도화된 실행과 절차를 채택한다. 배태성(embeddedness)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배태성이란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보고 사회규범도 고려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태성이 작용할 경우, 조직은 경제적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관계에서 정당성(legitimacy)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 ②(X).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속한다.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의 결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표준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정책, 절차, 구조의 선택이 유사해지며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 ③④(O). 아래 박스 내용 참조

<동형화의 유형>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는 유질동형화(isomorphism)의 과정으로서 파악하며, 결과성(consequentiality)의 논리보다는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논리를 강조한다. 동형화의 유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1)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공식적·비공식 압력이 있거나 혹은 조직에 대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라는 압력에 의해 조직 형태가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 (2)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조직을 모방해가는 과정의 결과 조직 형태가 유사해지는 경우이다.
- (3)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 :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혹은 전문가 조직이나 협회 등을 통해 전문관리자들 사이에 조직 형태에 대한 규범이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58-159. 핵심체크, p.64.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지방7급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지방비 70%)를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한다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 ③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책보조금에 해당한다.

[해설] ①(X). 문제에서 제시된 사업의 경우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이다. 따라서 국가가 56억 원을 보조해준다면 A시는 130.7억 원($56 \times 70 \div 30$)을 부담해야 한다.

②(X). 상수관망 구축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수돗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수돗물과 생수 소비량을 모두 늘릴 수 있다. 여기서 수돗물과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할 경우 보조금의 소득효과는 수돗물과 생수의 소비량 모두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소비량 증가할 경우 공급량 증가).

한편, 수돗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격이 낮아진 수돗물 소비량을 늘리고 수돗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생수의 소비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환경부의 상수관망 구축 사업 보조금은 소득효과(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 증가)와 대체효과(생수의 공급수준 감소)를 모두 유발한다.

③(0).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공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의 장려) 중앙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

④(X).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특정 목적 사업에 지원하는 정률보조금에 해당한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928-930. 핵심체크, pp.421-422.